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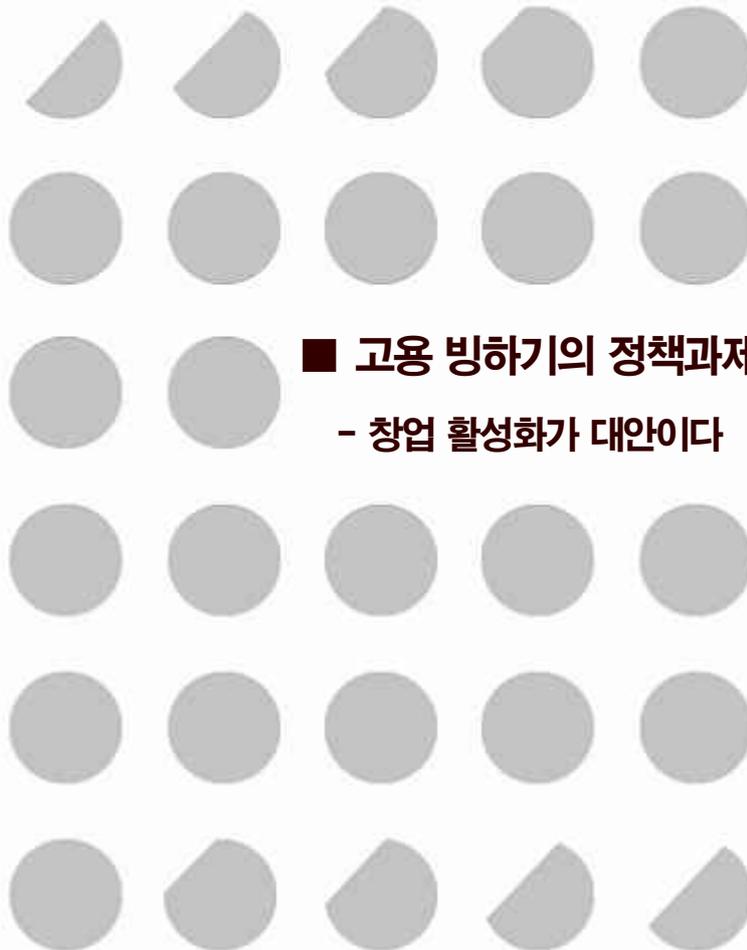


09-04 (통권 333호)

2009.1.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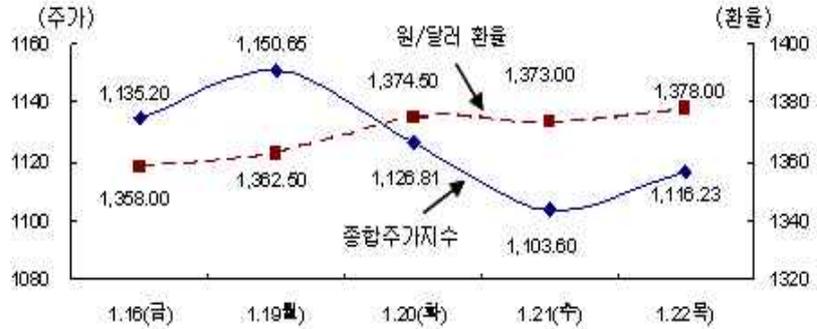


■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 창업 활성화가 대안이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6~1.22)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 1
  -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 창업 활성화가 대안이다 ..... 1
- 주간 경제 동향 ..... 18
  - 실물 부문 : 4/4분기 경제성장을 큰 폭 하락 ..... 18
  - 금융 부문 : 금융시장 불안 지속 ..... 1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물경제실   : 김 동 열 연 구 위 원 (3669-4112, dyki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 창업 활성화가 대안이다

#### 1. 서론: 고용 빙하기의 도래와 창업의 중요성

지난 2007년 취업자 증가는 28.2만 명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었으나, 2008년 12월에는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2천명 감소(2008년 전체로 보면, 14.4만명 증가)를 기록했다. 고용 빙하기가 도래하고 있다. 올해는 약 5만 3천 명의 취업자 감소가 예상(성장률 1% 전제)되며, 최악의 경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경험한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고용 빙하기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해법은 무엇인가? 2009년 상반기에 추진될 건설, 조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하에서 **실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창업의 열기는 식고 있다. 연도별 창업계획 승인전수를 보면 2000년에 피크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시장개입도 중요하지만,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이를 통한 '창업 활성화'**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창업부진의 현황과 배경, 10년전과 현재의 창업활성화 정책 비교, 녹색창업 활성화를 정책 제언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 2. 창업 부진의 현황과 배경

##### 2-1. 창업의 양적·질적 부진 실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 이후 신설법인은 감소하고 부도법인은 크게 증가하면서 창업배율이 급락하고 있다.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수를 뜻하는 **창업배율이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 크게 감소(7월 34.1, 8월 30.4, 9월 26.2, 10월 18.8, 11월 16.2)**했으며,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난 2001년 6만2,168개(전국 기준)이던 신설법인이 2008년에는 약 5만개(11월말까지 4만7,058개, 전국기준)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한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과 그에 따른 벤처창업 열풍에 힘입어 1998년의 2만개(8대 도시 기준)에 불과하던 신설법인이 2000년에 4만1천개(8대 도시 기준)로 2배 이상 급증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창업을 양적 부진과 더불어 질적인 악화도 큰 문제다. 업종별로 나눠서 보면 제조업 분야의 창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관련 창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에 비해,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생계형 창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등 창업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업종별 증감을 살펴보면, IT경기의 후퇴로 인해 **첨단기술 분야의 전기·전자·정밀기기업(-24.7%)과 통신서비스업(-12.1%)이 크게 감소**했으며, **생계형에 가까운 음식·숙박업(+21.2%), 도소매업(+7.6%)은 증가**했다. 참여정부에서 사교육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 노력했지만, **교육서비스업(+86.3%)과 부동산·임대업(+26.2%)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서비스'분야의 창업이 15%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벤처 창업활성화 정책에 의해 교수·연구원 출신 CEO의 창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나 2004년 39.5%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7년 12.4%로 크게 감소했다.

## 2-2. 창업 부진의 배경

세계은행이 2008년9월 발표한 '2009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은 181개국 중에서 126위로 1년전에 비해 16계단, 2년전에 비해 25계단 하락**했다.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창업절차는 10개에 달해 119위에 랭크**되었고, **창업소요기간은 17일로써 세계 60위, 창업소요비용은 1인당 GDP대비 17%로 91위,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1인당 GDP의 296%에 달해 144위를 차지**하는 등 4개 항목 모두 크게 부진했다(세계은행, '2008 기업환경평가', 2007년9월 발표).

여전히 담보대출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장설립 시에도 인허가절차가 복잡하고, 이로 인해 공장부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1만㎡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민간부문에 지불하는 대행료가 평균 4,300만원에 달했고, 소요기간도 150일이나 걸렸다.**

또한, **2~30대 사장의 비율이 지난 2001년 54.5%에서 2007년 14.0%로 크게 줄어**드는 등 기업가정신의 위축(기업가정신 지수: '99년 41.9 → '06년 4.4)도 심각하여 창업 부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창업의 절차와 규제도 문제지만, 중소기업 CEO들은 창업실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안전망 미흡 등 **패자부활전이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 3. 창업활성화 정책 비교 (1997년과 2008년의 위기 대처방식 비교)

10년 전과 현재의 경제위기가 그 원인과 경과는 다르지만, 그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일자리 감소,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증가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형편이다.

**10년 전 국민의 정부는 벤처·창업활성화 정책에 집중**, 신설법인이 '98년 2만개에서 2000년 4만개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부도법인은 '98년 7천7백개에서 2000년 2천8백개로 크게 감소했다. '98년 5월과 6월에 집중 발표된 벤처기업 지원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은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정보화 물결과 상승효과를 내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IT(정보기술) 관련 벤처열풍을 몰고 왔다. 2001년 이후 IT버블의 붕괴와 역선택,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를 조기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대규모 경기침체와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도 창업활성화이며 녹색성장과 연계한 녹색창업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치중되어 있으며 아직은 창업활성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지 않고 있다.

#### 4.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고용 빙하기에는 녹색창업·GT벤처의 활성화와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대안이다. 녹색창업(또는 'GT벤처')이란 친환경,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녹색 성장산업과 관련된 창업(또는 벤처)을 지칭하며, 세계 각국이 그린뉴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적극 살려야 한다.

첫째, 생계형 창업에서 '녹색창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2007년부터 창업시장에도 녹색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07년에 성공한 소상공인 창업아이템으로는 '모던+퓨전'이 28.5%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웰빙이 22.8%였다. 소상공인들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 분야의 과당경쟁에서 벗어나 녹색창업 분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 IT벤처에서 'GT벤처'로의 전환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대체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그린뉴딜의 열기가 뜨겁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IT(정보기술) 중심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기술(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탄소배출권 시장 등)관련 GT벤처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대란에서 조기에 벗어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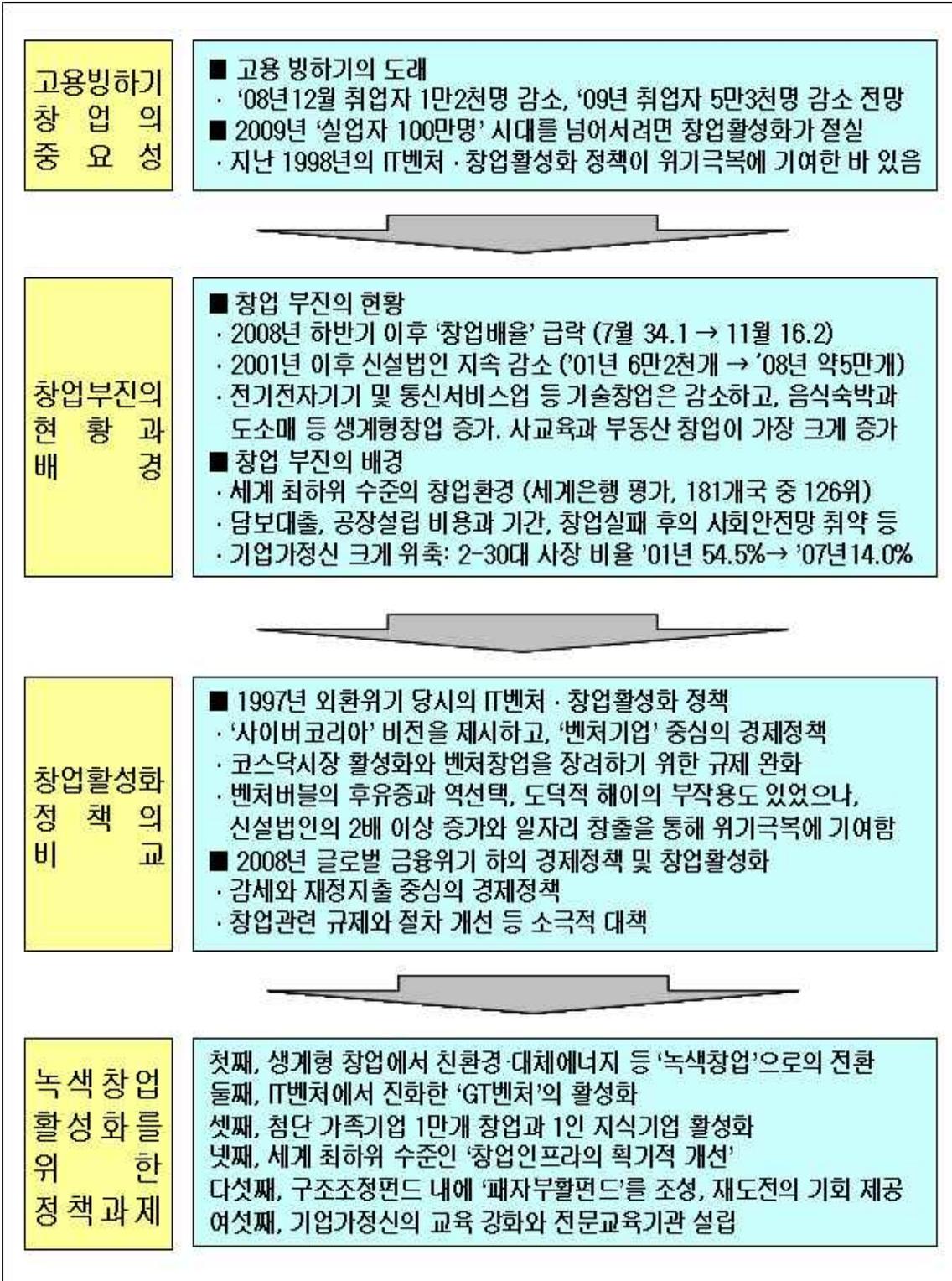
셋째, '첨단 가족기업' 1만개 창업과 1인 지식기업을 활성화한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 중인 '1인 지식기업'의 성장 애로요인으로 손꼽히는 (1)지식거래시장의 미 발달, (2)창업·세무 관련 경험과 정보 부족, (3) 1인 기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이러한 정책을 3인~5인 단위의 가족으로 확대하면 1년에 1만개의 첨단 가족기업과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육성할 수 있다.

넷째, 창업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환경은 2년 연속 크게 후퇴하여 181개국 중 126위에 불과하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완화(상법 개정), 절차 및 소요기간 단축, 창업실패 이후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패자부활 펀드의 조성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조성할 예정인 1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펀드 중 일부(30%)를 패자부활 펀드로 활용하여, 구조조정 대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패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더 크게 성공하는 기업인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가정신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다. 창업절차의 개선, 재도전의 기회와 시스템 구축, 창업실패 이후의 사회안전망 등이 기업가정신 함양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지만, 어릴 때부터 공교육 과정 속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산창업아카데미, 호암아카데미 등과 같이 창업자의 이름을 딴 기업가정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 창업 활성화가 대안이다 >



1. 서론 : 고용 빙하기의 도래와 창업의 중요성

○ (연구 배경) 작년 12월부터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취업자 수의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창업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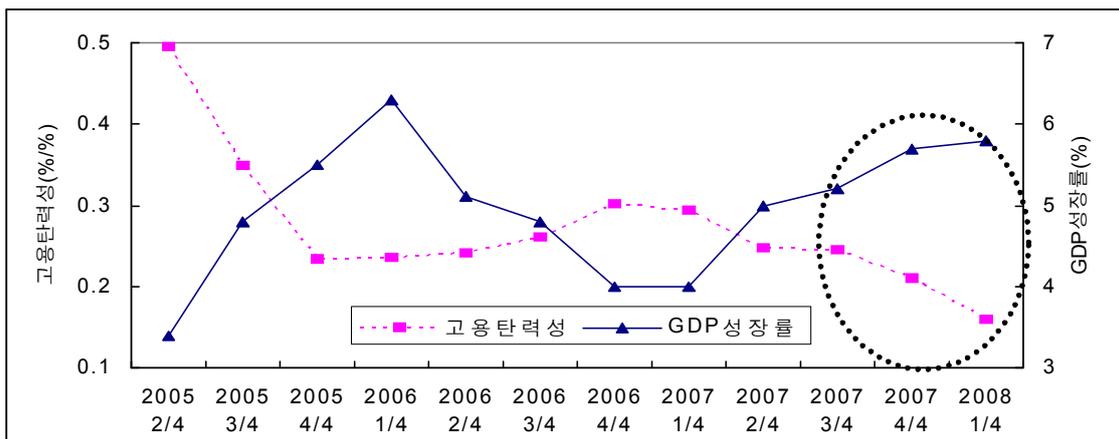
- 2009년도에 접어들어 본격화될 조선, 건설, 금융 분야의 구조조정과 실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시급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면, '창업활성화' 정책이 유일한 대안임

○ (고용대란 및 고용탄성치 하락) 2009년에 취업자는 증가하기보다 오히려 5만3천명 감소<sup>1)</sup>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탄성치<sup>2)</sup>도 크게 떨어짐에 따라 창업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형편임

- 지난 2007년 취업자 증가는 28만 명이었으나, 2008년 12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1만2천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음

· 경제성장률(GDP) 1%p 증가시의 취업자증가(萬 名)<sup>3)</sup>도 크게 둔화되고 있음  
 ('01년)10.9→('02년)8.5→('03년)△1.0→('04년)8.9→('05년)7.1→('06년)5.8→('07년)5.6

< 연도별 고용탄성치 감소 추이 >



자료 : 중소기업청(‘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2008.6.11)에서 재인용.

1) '08년 12월 취업자는 모두 2천324만5천명으로 前年同月대비 1만2천 명(0.1%) 줄었다. 취업자 감소는 지난 2003년 10월(-8만6천 명) 이후 5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노동연구원 분석(‘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9년 전망’, 2009.1)에 따르면, 2009년에 취업자는 5만3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1%성장 가정시)된다.  
 2) 고용탄성치는 GDP 1%p 증가에 대한 취업자증가율로서, 취업자증가율 ÷ GDP 증가율로 측정함.  
 3) 기획재정부,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자료’ (2008.12.16).

○ (창업 열기 냉각) 취업자 감소와 실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업활성화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창업의 열기는 식어가고 있음

- 중소기업청이 허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건수'도 지난 2000년 1,869건에서 2006년 623건으로 크게 감소함

< 연도별 창업사업계획 승인건수 >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업체 수	1,500	978	1,692	1,869	1,560	1,715	991	597	547	623

자료 : 중소기업청

○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기업가정신'과 개인의 '자유의지'가 위기극복에 가장 효과적임이 지적되고 있음

- 美 뉴욕大의 윌리엄 이스털리(W. Easterly)<sup>4)</sup> 교수는 격월간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 최근호에서 다음과 같이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역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료주의 보다는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 ... 故정주영 회장과 같은 개인 기업가는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국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위험과 불확실성 하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적인 조직체를 창설하는 행위이며, 조직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시장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자 정신” (슌페터)
  -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것” (피터 드러커)

4) 빈곤퇴치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국제원조를 주장하는 '제프리 삭스'교수와 '빌 게이츠'회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최근 급부상한 나라들은 무상원조보다는 자유의지와 자립심에 더 의존했다”고 주장한바 있음.

## 2. 창업 부진의 현황과 배경

### 2-1. 창업의 量的·質的 부진 실태

○ (창업의 量的 부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 이후 신설법인은 감소하고 부도법인은 증가하면서 창업배율이 급락하고 있음

-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수를 뜻하는 창업배율이 2008년 하반기 이후 크게 감소(7월 34.1, 8월 30.4, 9월 26.2, 10월 18.8, 11월 16.2)<sup>5)</sup>하고 있으며, 신설법인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난 2001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신설법인과 창업배율의 연도별 증감 추이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신설법인 (A)	21,831	20,095	30,701	41,460	62,168	61,852	52,739	48,585	52,587	50,512	53,483	47,058
부도법인 (B)	6,277	7,728	2,479	2,800	3,220	2,710	3,214	2,747	2,200	1,628	1,507	2,390
창업배율(A/B)	3.5	2.6	12.4	14.8	19.3	22.8	16.4	17.7	23.9	31.0	35.5	19.7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stat.smba.go.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kos.bok.or.kr).

주 : 2000년까지는 8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수원) 기준이며,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국 기준임. 2008년은 11월말 현재의 수치임.

- 2008년 창업배율의 급격한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도법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했지만, 신설법인의 숫자가 2001년 6만개 이상에서 2008년 5만개 수준으로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
- 이에 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한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과 그에 따른 벤처창업 열풍으로 2000년의 신설법인 수 4만1,000개가 1998년의 신설법인 수 2만개의 2배 이상<sup>6)</sup>임을 알 수 있음
  - 외환위기 극복에 있어서 ‘창업활성화’ 정책이 매우 유효했음을 보여줌

5)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stat.smba.go.kr)

6) 8대 도시 기준임. 신설법인 통계가 초기에는 8대도시 기준이었으며, 전국기준으로 바뀐 것은 2000년부터임.

○ (창업의 質的 악화) 업종별로 나눠서 보면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기술관련 창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생계형 창업은 증가하는 등 창업의 質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업종별 증감을 살펴보면, IT경기의 후퇴로 인해 첨단 기술 분야의 전기,전자,정밀기기업(-24.7%)과 통신서비스업(-12.1%)이 크게 감소했으며, 생계형에 가까운 음식숙박업(+21.2%), 도소매업(+7.6%)은 증가함
- 참여정부에서 사교육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지만 교육서비스업(+86.3%)과 부동산·임대업(+26.2%)의 대폭 증가를 막을 수 없었음
- 다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서비스' 분야 창업이 15.0%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업종별 신설법인 증감 추이 >

	2003년 (個)	2007년 (個)	증감률 (%)
제조업	12,445	10,396	-16.6
- 전기전자정밀기기	2,891	2,177	-24.7
건설 및 설비업	8,528	8,199	-3.9
서비스업	31,283	34,424	+10.0
- 도소매	12,082	12,997	+7.6
- 음식숙박	419	508	+21.2
- 통신서비스	460	404	-12.1
- 사업서비스	8,483	9,752	+15.0
- 부동산 및 임대	3,317	4,187	+26.2
- 교육서비스	343	639	+86.3
<b>합 계</b>	<b>52,739</b>	<b>53,483</b>	<b>+1.4</b>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stat.smba.go.kr).

- 생계형 창업의 과당경쟁은 매우 심각한 형편인데, 인구 1천명당 음식점이 미국의 7배, 일본의 2배에 달하며, 숙박업도 미국의 4배에 달함
  - 음식점은 우리나라가 12.2개로 미국(1.8개)의 7배, 일본(5.7개)의 2배 이상
  - 가전-시계-구두 수리업은 우리가 1.9개로 미국(0.8개), 일본(0.8개)의 2.4배
  - 소매업은 우리 사업체가 12.7개로 미국(3.2개)의 3.9배, 일본은 8.9개
  - 숙박업의 경우, 우리가 0.9개로 일본(0.5개)의 1.9배, 미국(0.2개)의 4.4배
  - 이·미용업의 경우, 2.2개로 미국(0.3개)의 8.3배, 일본(2.3개)과는 비슷

< 생계형 서비스업의 업종별 경쟁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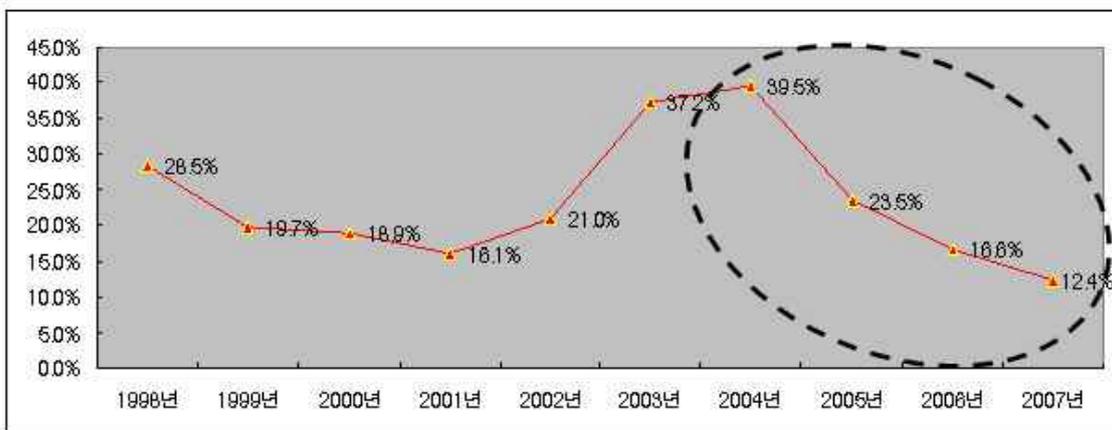
(단위 : 개, 배)

	인구 1천명당 사업체 수			미국 대비(미국 2002년 = 1)	
	한국(2005)	일본(2006)	미국(2002)	한국	일본
소매업	12.7	8.9	3.2	3.9	2.7
음식점업	12.2	5.7	1.8	7.0	3.2
이·미용업	2.2	2.3	0.3	8.3	8.5
수리업	1.9	0.8	0.8	2.4	1.0
부동산 중개업	1.5	0.4	0.3	5.6	1.4
숙박업	0.9	0.5	0.2	4.4	2.4

자료 : 통계청 KOSIS, 일본 총무성 통계국, 미국 Census Bureau (한국은행(2008.10)에서 재인용).

- 또한, 외환위기 이후의 벤처창업 열기가 정점에 달한 후 IT경기의 퇴조 등에 따라 교수·연구원 출신CEO의 창업비중이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음
  - 교수·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의 숫자도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04년) 3,144개 → ('05년) 2,290개 → ('06년) 2,022개 → ('07년) 1,738개

< 교수·연구원 출신 CEO가 창업한 벤처기업의 비중 >



자료 : 중소기업청.

7) 한국은행,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2008년10월

## 2-2 창업 부진의 배경

○ (열악한 창업환경, 181개국 중 126위) 세계은행(World Bank)이 '08년 9월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in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은 전체 비교대상 181개국 가운데 126위로 작년보다 16계단 하락함

- 전체적인 기업환경평가는 2008년 30위에서 2009년 23위<sup>8)</sup>로 개선되었으나, 창업과 고용(해고)의 2가지 항목은 각각 126위, 152위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업환경평가 연도별 추이 >

평가 항목	2009년 기업환경	2008년 기업환경	2007년 기업환경	전년 대비
기업환경 (종합)	23위	30위	23위	+7
창 업	126위	110위	101위	-16
공장설립	23위	22위	16위	-1
고용·해고	152위	131위	130위	-21
재산권 등록	67위	68위	65위	+1
자금조달·대출	12위	36위	32위	+24
투자자 보호	70위	64위	62위	-6
세금 납부 <sup>9)</sup>	43위	106위	106위	+63
상품 수출입	12위	13위	30위	+1
계약 집행	8위	10위	10위	+2
폐 업	12위	11위	10위	-1

자료 :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in 2009, 2008, 2007」.

주 : 각 항목별로 용이성(easiness)을 평가함.

8) OECD회원국들의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2), 미국(3), 영국(6), 일본(12), 한국(23), 독일(25), 네덜란드(26), 프랑스(31), 스페인(49), 멕시코(56), 터키(59).

9)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횟수(연 48→14회), 납부시간(290→250시간), 세 부담률(34.9→33.7%) 등 모든 항목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받은 결과, '세금 납부'의 순위가 크게(106위에서 43위로) 개선됨.

- 창업환경의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창업 절차(10개, 119위), 창업 소요기간 (17일, 60위), 창업 소요비용(1인당 GDP 대비 17%, 91위), 최소자본금 (1인당 GDP의 296%, 144위) 등 4가지 항목에서 모두 부진<sup>10)</sup>했음
- 이처럼 창업환경에 대한 2009년 평가가 2008년에 비해 16계단이나 하락한 것은 정부의 정책역량이 '창업환경 개선'(창업절차 간소화와 최소자본금 대폭 인하)에 집중되어야 함을 보여줌

< 창업환경의 세부항목별 평가 >

항목	한국	호주	OECD평균
창업 절차 (개)	10개 (119위)	2개 (1위)	6.0개
창업 소요기간 (일)	17일 (60위)	2일 (1위)	14.9일
창업 소요비용 (1인당 GDP대비, %)	16.9% (91위)	0.8% (6위)	5.1%
최소자본금 (1인당 GDP대비, %)	296.0% (144위)	0.0% (1위)	32.5%

자료 :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in 2008」, 2007년9월.

주 : 한국의 순위( )는 전체 181개국 중 순위를 나타내며, 호주는 OECD 24개 회원국 중 순위.

○ (여전한 담보대출 관행<sup>11)</sup>)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과 창업자금의 양적 확대('03년 3,200억 원 → '07년 6,200억 원)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감소

- 창업 후 3년 미만인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이 감소<sup>12)</sup> 중[( '03년)14.3% → ('07년)13.4%]에 있으며,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투자비율도 크게 감소 [( '02년)63.5% → ('04년)32.1% → ('06년)30.3% → ('08.4)37.8%]

○ (창업 공간의 부족) 창업보육센터와 벤처집적시설 등을 공급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창업 공간 및 지원서비스가 부족함

- 공장설립시에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이로 인해 공장부지 확보가 곤란함
- 1만㎡ 규모의 공장설립시 민간부문 대행료 평균 4,300만원, 소요기간 150일

10)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in 2008」, 2007년9월.

11) 중소기업청,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2008.6.11.

12) 중소기업청(2008.6).

- (고급인력 확보난) 교수와 연구원의 휴·겸직제도, 벤처기업 병역특례, 스텝제 등 운영 중에 있으나, 고급인력 확보에 여전히 애로 많음
  - 기술개발 수행 時의 애로요인 조사('07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①기술개발인력 확보 곤란(23.5%), ②기술개발자금 부족(20.8%), ③연구설비·기자재 부족(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판로확보의 어려움) 창업초기의 기업은 판로확보를 위해 홍보 및 판로정보 제공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정책지원이 부족
  - 주요 희망 거래처로는 B2B 53.7%, B2C 29.2%, 공공부문 12.3%, 수출 4.0% 등으로 나타남
  
- (창업실패 후의 사회안전망 취약) 중소기업 CEO들은 창업실패 이후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음
  - 중소기업CEO들을 대상으로, 창업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주된 요인을 물어본 결과<sup>13)</sup>, '창업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 취약'(33.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복잡한 창업절차 등 규제'(28.6%),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23.9%), '기업에 대한 불신'(9.1%) 등의 순이었음
  - 이는 '창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in 2009」)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창업실패 이후의 사회안전망 취약'이 더 핵심적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경쟁국에 비해 창업환경이 나쁜 이유 >

설문 항목	답변 비율
- 창업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이 미약하다	33.0%
- 복잡한 창업절차 등 규제	28.6%
-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	23.9%
- 기업에 대한 불신 정서	9.1%
- 기타	5.4%

자료 : 산업연구원 (2008.11).

13) 산업연구원, '기업가정신의 발현실태와 함양방안'(산업경제정보, 2008-46), 2008.11.17.

○ (기업가정신의 위축) 위와 같은 '열악한 창업환경'과 '창업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 취약', 그리고 '실패를 포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기업가정신의 위축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남

-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가정신은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가 지나면서 투자기회의 축소, 노사관계의 변화, 정부규제 등의 영향을 받았음

기관	기업가정신의 약화 추이
대한상공회의소	('70년대) 32 → ('80년대) 22 → ('90년대) 9 → ('2000년대) 6
한국은행	('99) 41.9 → ('00) 32.7 → ('02) 4.7 → ('04) 0.1 → ('06) 4.4

주 : 대한상공회의소 지수 = (사업체수 증가율+설비투자율+민간연구개발비 증가율) ÷ 3.  
 한국은행 지수 = 제조사업체 증가율+(실질 설비투자 증감률-실질GDP 성장률).

- 2000년대 초반 벤처열풍 당시 창업을 주도했던 20~30대의 젊은 층이 창업을 기피하고 있음
  -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20代 社長의 비중이 지난 '01년 5.9%에서 '07년 0.2%로 줄었고, 30代의 비중도 '01년 48.6%에서 '07년 13.8%로 크게 줄었음
- 기업가정신이 약화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불가능'(36.2%)이었으며, 이어서 '수익창출 기반의 약화'(31.9%), '반기업 정서'(12.6%), '과도한 규제'(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기업가정신 약화의 주요 요인 >

(단위 : %)

		기업가정신 교육 부재	과도한 규 제	反기업정서 에 따른 경쟁의욕 감퇴	사업실패 후의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불가능	수익창출 기반 약화	기타	합계
전 체		6.5	11.6	12.6	36.2	31.9	1.2	100.0
종사자 규모	20인 미만	6.6	13.3	6.1	41.8	30.1	2.1	100.0
	20-49인	7.9	8.6	17.1	32.9	32.9	0.6	100.0
	50인 이상	3.2	12.9	22.6	25.8	35.5	0.0	100.0

자료 : 산업연구원 (2008.11).

### 3. 창업활성화 정책 비교

○ (경제위기의 재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원인과 경과는 다르지만, 그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의 증가, 중산층·서민의 경제적 고통은 10년前과 유사한 성격을 지님

- 1997년말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었으며, 일시적 달러부족을 IMF구제 금융으로 해소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기침체로부터 조기에 탈출함.
- 10년 후에 다시 닦쳐온 경제위기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우리의 주된 무역상대국들이 모두 함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10년 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며, 따라서 경기회복도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
- 위와 같이, 10년前과 현재의 경제위기가 그 원인과 경과는 다르지만, 그로 인한 실업자 증가, 일자리 감소,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마찬가지로 심각함

○ (10년前과 현재의 창업활성화) 10년前 국민의 정부는 벤처 및 창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한 바 있으나, 지금은 감세와 재정지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

- 10년前 국민의 정부는 벤처·창업활성화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신설법인의 증가폭이 '98년 2만개에서 2000년 4만개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부도법인은 '98년 7천7백 개에서 2000년 2천8백 개로 급감하였음

< 10년前 벤처·창업활성화로 인한 신설법인의 급격한 증가 >

연도	1997	1998	1999	2000
신설 법인 (A)	21,831	20,095	30,701	41,460
부도 법인 (B)	6,277	7,728	2,479	2,800
창업 비율(A/B)	3.5	2.6	12.4	14.8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stat.smba.go.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kos.bok.or.kr).

주 : 8大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광주,대전,수원) 기준임.

- 현재는 창업활성화와 관련하여 '최소자본금 인하' 등 규제완화와 창업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음
- 그러나, 주식회사 설립시의 최소자본금 5천만 원(벤처인증 기업 2천만 원)이 과다하다는 국내외의 지적에도, 「상법」의 관련 조항은 아직 개정 안 됨

< 경제위기時 창업활성화 등 경제정책 비교 >

	1997년 경제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2008년 경제위기 극복 대책 (감세, 재정지출, 규제완화)
감 세	▶ 감세 없었음 (세수 감소, 감세여력 부족)	▶ 유가환급금(08~09년)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감세 35.3조원(08~12년)
재정지출	▶ 당시 IMF에서 고금리와 긴축을 요구 (‘98년 중반,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소극적 지출확대)	▶ 추가경정예산(08년), 경제난국극복 수정예산(09년) 등 재정지출 16조원 ▶ 4大江살리기 등 녹색성장에 50조원
창 업 활성화	▶ 코스닥과 벤처창업 활성화에 집중 (신설법인 2배로 증가) - 코스닥시장 활성화 (‘98년6월) (법인세 감면, 대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감면 등) - 벤처창업 활성화 (‘98년5월) (실험실 창업, 교수·연구원 스톡옵션 벤처 주식 담보허용 등 규제완화)	▶ 최소자본금 인하와 창업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집중 ▶ ‘기술창업’ 중심으로 선별적 접근 -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최소화하면서, 간접적인 인프라 확충 및 기존 금융권을 통한 지원으로 정부실패 최소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 일자리 창출(특히, 고학력 실업자)대책으로 효과적 ▶ 도덕적 해이와 감독 소홀로 ‘99년부터 ‘01년까지 코스닥 과열 벤처펀드 파산 벤처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1조 부실 등 부작용	▶ 도덕적 해이와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심스런 접근

#### 4.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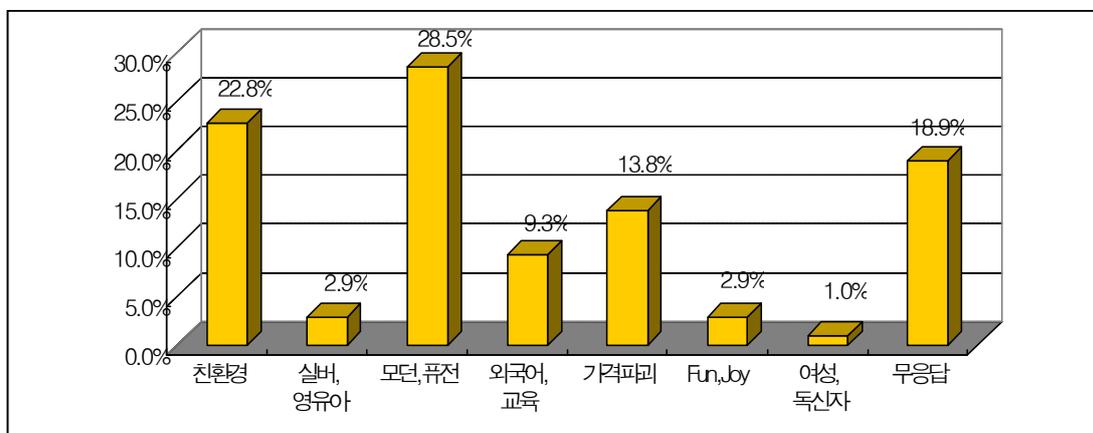
○ (창업활성화로 위기 극복) 10년前 외환위기 극복에 벤처·창업활성화가 크게 기여했듯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증가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창업기회, 녹색창업 : 친환경,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녹색 성장산업과 관련된 창업 또는 벤처를 녹색창업 또는 GT벤처라 부르며, 세계 각국이 2009년도에 그린뉴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적극 살려야 함
- 비즈니스프렌들리의 기조 하에서 녹색창업·GT벤처의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함양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

○ (생계형창업에서 녹색창업으로) 소상공인들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생계형창업' 분야의 과당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망시장인 친환경·웰빙(녹색창업)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함

- 작년2월 중소기업중앙회<sup>14)</sup>가 발표한 '2008 소상공인 창업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창업시장에도 녹색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음
- 2007년에 성공한 소상공인 창업 아이템으로는 '모던 + 퓨전' 관련 아이템 (28.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환경·웰빙' 22.8%, '가격파괴' 13.8%, '외국어·교육' 9.3%, '편(Fun)·조이(Joy)' 2.9%, '실버·영유아' 2.9% 등임

< 2007년 성공 창업아이템유형 >



14) 중소기업중앙회, '2008 소상공인 창업트렌드', 2008.2.

○ (IT벤처에서 GT벤처<sup>15)</sup>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대체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그린뉴딜'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에 발맞춰 'GT벤처' 활성화에 집중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신성장산업도 육성 가능함

-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은 태양광, LED, 풍력, 전력IT, 수소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무한경쟁을 시작함

< 주요 국가의 그린뉴딜 정책 >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간 1,500억달러 투입해 청정에너지 개발. 500만개 일자리 창출</li> <li>-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카 100만대 보급</li> <li>-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2012년 10%, 2025년 25%로 점차 확대</li> <li>- 탄소배출거래제를 통해 2050년까지 현 탄소배출량의 80%로 감축</li> </ul>
일 본	◆ 2015년까지 환경시장 100조엔 규모로 확대. 220만개 일자리 창출
영 국	◆ 대체에너지 10대 프로젝트에 100억파운드 투자. 10만개 일자리 창출
독 일	◆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산업을 자동차산업 규모로 확대
프랑스	◆ 2020년까지 4,000억유로 투자하여 친환경·에너지산업 확대
한 국	◆ 2012년까지 50조원 '녹색성장' 산업에 투자. 96만개 일자리 창출

- **GT벤처 활성화** : 10년 전 외환위기를 IT(정보기술) 중심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으로 조기에 극복했다면, 10년 후 다시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아래와 같은 친환경기술과 관련된 'GT벤처'의 활성화로 넘어서야 함

- **신재생에너지<sup>16)</sup>**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95만 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현재의 2.4%에서 2030년에는 65%로 비중을 높여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계획

※ 2030년까지 설비투자 100조원, R&D투자 11조5천억원 등 총111조5천억원 투자

- **그린에너지** : 그린에너지 산업의 생산규모는 2013년에 170억 달러, 2030년에는 3,000억 달러에 이르고 고용 규모는 2013년에 10만 5,000명, 2030년에 154만 명으로 추정 (9개 분야에 2012년까지 5년간 3조 원 투자)

※ 9개 분야 :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수소연료전지, CTL/GTL, CCS, 에너지저장, IGCC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 지식경제부는 2030년 생산 3,000억 달러, 고용 154만 명을 목표로 하는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발표

-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 : 2005년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는 2005년 109억 달러에서 2007년 640억 달러로 6배로 급증함

15) 'GT벤처'란 친환경,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녹색성장) 산업과 관련된 벤처기업을 폭넓게 지칭함. 정보통신기술(IT)이 중심이 되었던 1990년대의 'IT벤처'에 대응하여, 2008년부터 거세게 불고 있는 친환경-에너지관련 벤처기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함.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IT중심에서 친환경·에너지절약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그린밸리'로 변신 중에 있음(매일경제, 2009. 1.15).

16) 현대경제연구원, 「2009년 국내경제·사회변화의 10대 특징」(경제주평 09-02), 200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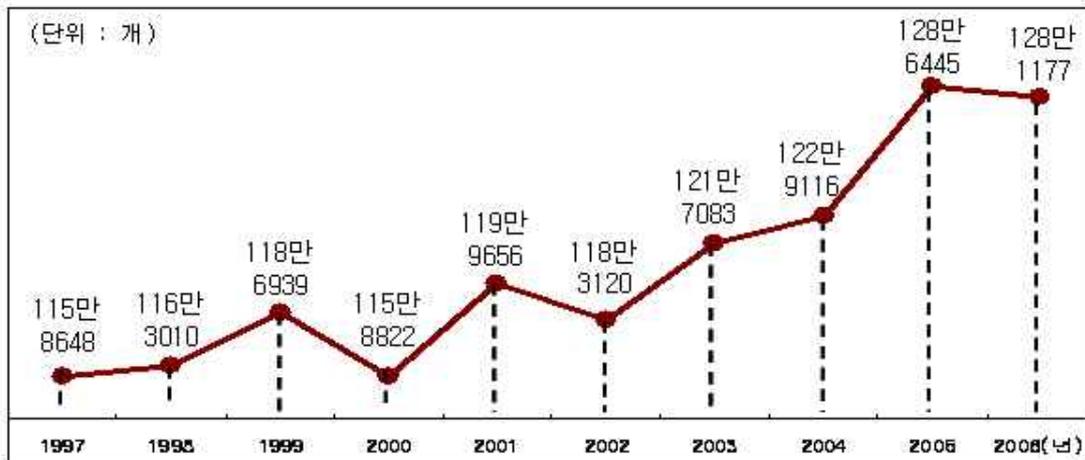
< GT관련 벤처투자 및 친환경 기술개발 현황 >

	그린 벤처투자 및 기술개발 내용
실리콘밸리	◆ 2008년 3/4분기에 투자된 세계 친환경벤처투자(26억 불) 금액의 약1/6(14.2억 불)이 실리콘밸리에 투자됨
스탠퍼드대	◆ ‘에너지연구소’ 설립(1억 달러 투자). 태양광 전지 등 청정에너지원 개발 전력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에 주력
UC버클리대	◆ ‘에너지 바이오 사이언스 연구소’ 설립 (BP에서 5억 달러 유치) - 청정에너지 연구에 주력

○ (1인 지식기업과 첨단 가족기업 1만개 육성) 독일과 미국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1인 기업(Me Inc 또는 Ich AG)의 육성을 위한 획기적 지원과 함께 3인~5인의 첨단 가족기업(팀)<sup>17)</sup> 1만개 창업을 지원함

-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sup>18)</sup> 발표: 작년 11월 향후 5년간 1인 지식기업 5만개 창업과 프리랜서 13만명 등 총 1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1인 지식기업<sup>19)</sup>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1인 기업 연도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17) **첨단 가족기업**이란 3인~5인의 가족구성원들이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하여 집에서 자료작성, 디지털콘텐츠가공, 디자인, 인터넷마케팅, 정보처리 등을 사업화하는 ‘첨단 가족기업’으로서, 가내수공업 중심의 전통 가족기업과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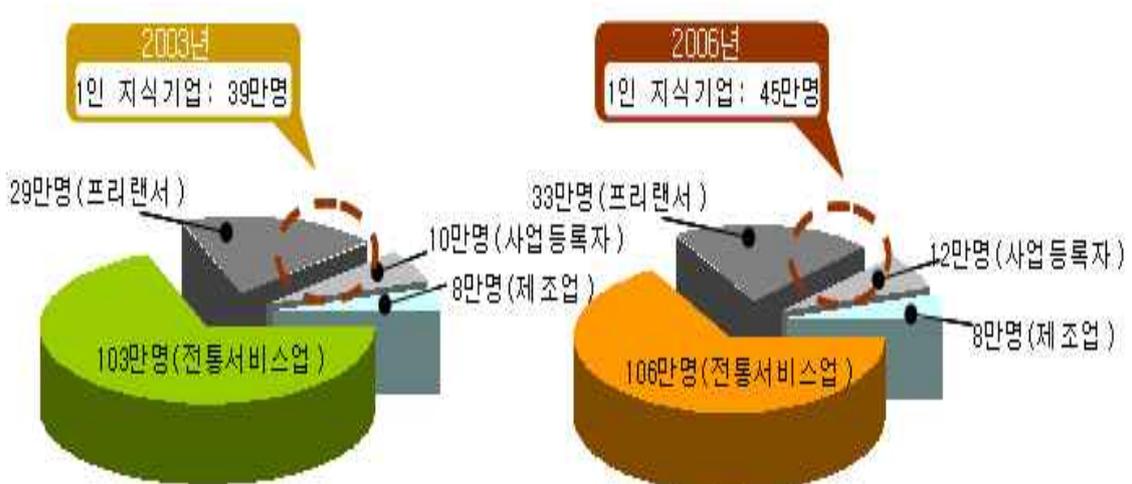
18) 그 주요 내용은 (1) 1인 지식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역량 강화, (2)새로운 수요 창출 및 인지도 제고, (3) 1인 지식기업의 시장 생태계 조성 등으로 구성됨.

19) **1인 기업**이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식(자본총액 5억원 미만) 및 유한 회사형태의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인인 기업을 말함. 1983년 톰 피터스에 의해 ‘Professional Service Firm’이라는 개념으로 최초 소개되었고, ‘브랜드 유’(Brand U) 또는 ‘나 주식회사’(Me Inc)라 정의.

**1인 지식기업**이란, 1인 기업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분야 6개 업종(①통신업, ②금융·보험업, ③사업서비스업, ④교육서비스업, ⑤보건·사회복지사업, ⑥오락·문화·운동 관련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칭.

- 독일 등 서구 선진국 사례 : 미국과 독일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1인 지식기업이 이미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했고, 다양한 지원정책도 실시 중
  - 미국 : 실리콘밸리는 R&D·디자인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1인 지식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실리콘밸리의 실업률을 크게('02년 8% → '06년 4%) 낮춤
  - 독일 : 통일이후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1인 기업(Ich AG)지원 프로그램'(1인 창업後 연소득이 25,000유로 미만時 보조금 지급)운영을 통해 매년 30만 개의 1인 기업이 설립되고 있음
  - 한국 : 1인 지식기업은 최근 4년간('03~'06) 연평균 4.5% 성장 중이며, '06년 1인 지식기업 수는 약 45만명으로, 사업자 등록자가 11.7만명, 未등록사업자(프리랜서)가 32.8만명 활동
  
- 1인 지식기업의 성장 애로요인 해소 : 우리나라 1인 지식기업은 (1)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지식거래 시장의 미발달, (2) 창업·세무 등에 관한 경험 및 정보·기술 습득의 부족, (3)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는데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야 함

< 1인 기업 중 지식기업의 비중 >



자료 : 중소기업청.

○ (창업인프라의 획기적 개선) 10여년 空轉 中인 '최소자본금 대폭 인하' 또는 '1원 주식회사 설립'등 일본이나 서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수준으로 창업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외형적 노력보다 더 본질적인 환경개선에 집중해야
- 창업활성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인하'(商法 개정안 법사위 계류 中)와 관련하여 10년 이상 법무부와 경제부처(중소기업청 등)가 空論을 벌이는 현실과 창업절차가 10단계 이상인 현실을 타파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 창업과 관련된 3가지 서로 다른 법령 >

근거 법령	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 조항 (내용)
◇ 상법 (329조의 1)	▷ 주식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어야 한다.
◇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10조의 2)	▷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500만 원 이상으로도 가능하다. (시행령에서 2천만 원으로 정함)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8조의 2)	▷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5천만 원 미만으로도 가능하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시스템.

주 : 소기업이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50인 미만, 서비스업 기타는 10인 미만.

- 또한, '창업실패 후의 사회안전망 보완'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例 : 소상공인 공제조합 '노란 우산')을 마련
- 故정주영 회장, 故이병철 회장 같은 1세대 창업자들에 이어 2세대, 3세대 창업자들이 대그룹을 일으키고 성공하도록 도와야 기업가정신이 계속 전승됨

○ ('패자부활' 펀드 조성) '실패가 중요한 자산'임에도 이를 살리지 못하고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므로, 국책은행을 활용하여 '패자부활' 펀드를 조성하여 제도전의 기회를 제공함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을 활용하여 조성할 예정인 1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펀드 중 일부를 '패자부활펀드'로 조성하여, 퇴출시키기에 너무 아까운 기업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예를 들어, 국책은행이 조성한 구조조정펀드로 옥석을 가려 일부(약 30%) 기업에게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것

- (기업가정신의 함양) 대기업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전문재단이나 전문교육기관<sup>20)</sup>을 설립하는 등 기업가정신 함양에 민관이 함께 나서야
-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전문교육기관이나 재단을 설립하여(例: '아산창업아카데미', '호암아카데미' 등)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기업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김동열 연구위원 (3669-4112, dykim@hri.co.kr)

- ▶ 美, "Mini Society" Program(8~12세)으로 기업가 활동의 개념과 경험사례를 제시, 10~20주 교육, 주당 45~60분
- ▶ 美, "Making a Job" Program: 12~17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사회 또는 경영과목을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  
(A Basic Guide to Entrepreneurship Readiness)
- ▶ 英 Strathclyde大는 예비교원에 대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 ▶ 덴마크 :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cademy 설립('03년)

20) 일본의 '마쓰시타정경숙(松下政經塾)'은 미국의 하버드大學 케네디스쿨을 본떠 정치·경제 분야의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1979년에 마쓰시타(松下)전기의 마쓰시타고노스케 회장이 개인 재산 70억엔과 그룹 산하기업의 찬조금 50억엔을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창업주의 이름을 걸고 출연해서 정치·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리 대그룹들에게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4/4분기 경제성장률 큰 폭 하락

- 22일 한국은행에 속보치에 따르면 4/4분기 내·외수 동반 악화로 전년동기대비 -3.4%(전기대비로는 -5.6%)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
- 경제활동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전년동기대비 3.8%), 제조업(-9.2%), 건설업(-4.7%)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침체된 양상을 보임
- 지출측면에서는 설비투자(-14.0%), 건설투자(-6.1), 민간소비(-4.4%), 수출(-11.5%)를 보이며 내·외수 동반 악화가 심화됨
- 한편 설비 및 건설투자의 부진을 반영하는 내수(제고 제외)는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함
- 교역조건을 반영하는 국내총소득(GDI)는 전년동기대비 5.6%(전기대비로는 2.9%) 감소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3/4	11월	12월		
			연간	3/4	4/4	1/4				2/4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3.8(0.5)	-	-3.4(-5.6)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1	-5.9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6.1	-18.0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2.8	-35.4	-
		수출	14.4	14.1	9.4	18.2	17.4	23.1	27.1	-19.0	-
	공급	광공업생산	8.4	6.8	5.9	10.8	10.6	8.6	5.6	-14.1	-
		취업자수(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73	2,382	-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0	3.1	-
		수입	18.4	15.3	7.3	25.9	28.9	30.5	43.0	-14.9	-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54	60	44	32	-52	-1	-86	21	-
무역수지(억\$)		161	146	45	27	-65	3	-80	1	-	
물가	생산지물가	0.9	1.4	1.2	3.0	5.1	9.0	11.3	7.8	5.6	
	소비지물가	2.2	2.5	2.3	3.4	3.8	4.8	5.1	4.5	4.1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금융시장 불안 지속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 금리 대폭 상승

- 금리: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책에 따른 국채공급물량 대폭 확대 전망에 따라 전주말 대비 급등 (국채 10년물 : 2.32→2.59%)
- 환율: 엔화는 글로벌 금융불안 재연 등의 영향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 되면서 달러화에 대해 전주말 대비 강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는 유럽의 경기 침체 심화 우려로 달러화에 약세 시현 (\$/€ : 1.3267→1.3001, ¥/\$ : 90.72→88.91)

○ (국내 금융 시장) 국채금리 급락

- 주가: 지난 4/4분기 GDP성장률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 기록과 실물경기 침체 심화 우려 확산에 따른 하락 압력이 미국 상업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기대감에 따른 상승압력을 압도하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1,135.2→1,116.2)
- 금리: 채권금리의 단기급등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경기침체 우려가 재부각 등이 가세하면서 전주말 대비 급락 (국고채 3년 수익률: 3.61→3.39%)
- 환율: 글로벌 금융 불안 재연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여 전주말 대비 상승 (1,358.0→1,378.0)

○ (전망) 경기침체 심화 우려로 국채 금리 추가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009	
		3/4	4/4	1/4	2/4	3/4	4/4	1.16	1.22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24.5	1,135.2	1,116.2
	국고채3년(%)	5.46	5.74	5.10	5.90	5.74	3.41	3.61	3.39
	원/달러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59.5	1,358.0	1,378.0
해외	DOW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776	8,281	8,123
	Nikkei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860	8,230	8,052
	미국채10년(%)	4.59	4.02	3.87	3.97	3.82	2.21	2.32	2.59
	일국채10년(%)	1.69	1.51	1.45	1.60	1.47	1.18	1.23	1.24
	달러/유로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72	1.3267	1.3001
	엔/달러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0.64	90.72	88.91
	두바이(\$/바rel)	76.64	89.06	97.66	136.65	90.60	34.66	45.09	42.91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21) 기준.